

## 일본의 소득격차는 심각한가요?

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분명 젊은 계층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을 높여 소득격차를 해소시켜야 할 것임

### 1. 확대되는 소득격차

- 일본의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임
  - 일본에서는 젊은 무직자(NEET)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과거에 비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
  -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이른바 ‘승자’와 ‘패자’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
  - 한편, 심각한 불황의 여파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급증하면서 소득격차 해소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
-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‘지니계수’임
  -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
  - 3년마다 발표되는 후생노동성의 소득재분배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지니계수는 2002년 0.4983, 2005년 0.5263, 2008년 0.5318로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음

- 그러나 일본의 지니계수는 미국, 영국,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임

## 2. 소득격차 확대 이유

- ‘소득격차’ 를 나타내는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
  - 지니계수는 **고령화의 영향이 64%**, 독신세대 증가 영향이 25%로 일률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
  - 젊은 무직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‘**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져 결국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**’ 고 보고 있으나, 1990년대 장기 불황의 여파가 젊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도 있음
- 소득격차는 고이즈미(小泉)정권이 추진했던 규제완화, 시장중시 정책, 재정건전화 등에 대한 반발이 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
  - 정책을 구태의연한 공공사업 확충과 정부의 규제강화로 선회시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곤란함
  - 최근 젊은이들의 취업지원과 학습기회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논의되고 있음
  - 그 대표적이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로, 민주당은 육아지원과 최저보증연금 도입 등을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
-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만으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  -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잠재경제성장률을 높여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임

<참고자료> 노동후생성 홈페이지